

들어가며

한국교회총연합회를 비롯한 개신교 단체가 연합하는 연합예배가 2024년 10월 개최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를 위해 사전에 배포한 100대 기도제목 책자(1027한국교회 200만연합예배및큰기도회조직위원회, 2024)에서, 15번부터 30번까지의 섹션 제목이 “동성애 차별금지법 및 젠더 성혁명에 관한 기도제목”이다. 또한 1번부터 45번까지는 “젠더갈등과 비혼주의, 저출산에 관한 기도제목”을 제시하고 있다. 100대 기도제목의 1번부터 15번까지는 해당 기도회의 성사를 위한 제목이다. 그렇다면 결국 ‘국가를 위한 가장 중요한 개신교의 사명’은 동성애와 페미니즘 논의를 적대하는 것이 된다. 실제 이 기도회의 제목은 ‘건강한 가정과 거룩한 나라’를 표방한다. 현재의 한국 개신교에 있어 가장 큰 적은 성소수자의 존재 그리고 페미니즘 사상이라고 명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징적 선언이기도 하다.

성소수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논의가 종교와 불화하는 경우는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종종 발견된다. 특정한 종교적 신념을 유지하려는 사람들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발화를 종교의 자유라고 주장하고 더 나아가 시민단체와 같은 형태를 통해 적극적으로 정치 과정에 개입하고자 한다. 한국의 경우에도 그 상황은 다르지 않다. 특히 개신교 보수 집단에서 다양한 형태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성소수자 혐오 담론을 구성하고 있다. 게다가, 한국은 성소수자 차별을 금지하는 명시적 법이 아직 없는 상태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없는 상황에서 성적 지향이 차별 사유로 명확하게 적시된 법·제도는 드물다. 예를 들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규정에서 규제하는 차별, 비하 사유에는 성적 지향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 인권 단체들이 연대하여 2011년 차별금지법제정연대를 결성하여,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개정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법 제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더디게 진행되는 것은 개신교 보수주의 세력이 다양한 수준에서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1990년대부터 정치적 가시성을 높이기 시작한 한국의 개신교 우파 세력은, 반공주의라는 교리를 중심으로 국가 안보 담론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기 시작했다(Heo, 2021). 즉, 기독교 보수주의자들의 정체성 형성과 정치적 행위에서 주요한 적대 세력으로 설정된 것은 좌파 세력이었고 이 적대는 국가 안보의 맥락에서 정당화되었다. 그런데 사실상 안보 담론의 영향력이

쇠퇴하기 시작하는 2010년대 전후로, 개신교 보수 단체들은 국가 안보의 맥락으로 성소수자 단체를 비난하며, 이들이 국가에 대한 위협 세력이라는 담론을 개발하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Chen, 2024). 즉,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 인정되어서는 안 되는 대상이 종북 좌파에서 성소수자에까지 범위를 넓힌 것이다.

보수 개신교 단체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보수 세력들과 ‘가족의 수호’라는 점에서 유사한 가치를 유지하며, 나라를 수호하는 애국자라는 정체성을 형성하고자 한다. 2010년대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남성연대 역시 건강한 가족과 조국의 수호라는 가치를 제시하여 왔다.¹⁾ ‘가족과 국가’의 일치 속에서 이를 수호하기 위해 보수적 시민 단체들은 동성애는 가족의 안정을 해치는 존재들로, 이를 인정하자는 주장이나 담론들을 사회악으로 규정한다. 이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을 ‘양심적 혐오표현권’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차별적 언사나 혐오표현도 헌법에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이므로 공중도덕이나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혐오할 자유가 있다는 것이다(지영준, 2021). 이러한 맥락에서 보수적 개신교 단체들은 국회에 대한 압력 행사, 시민단체 결성과 관련 행사 개최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해 왔다.

주로 차별금지법 제정과 생활동반자법 제정 시도 등 법/제도 영역과 관련하여 동성애에 대한 논의를 막고자 했던 보수 세력의 노력이 최근 결집되는 영역은 교육 영역이다. 학생인권조례 및 성교육이라는 두 가지 쟁점이 기독교와 페미니즘, 그리고 퀴어운동의 격전지가 되어가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보수적 개신교 세력에서 성적 지향의 인정을 명시하는 것을 반대하는 가운데,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하락을 방조한다는 주장이 연결되면서 일부 시민들 역시 찬성 입장을 보이게 되었다. 이에 2024년 충남도의회, 서울시의회가 폐지를 결정하였고 교육청들이 이에 법적으로 대응하는 대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교육 내용에 대한 민원들 역시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으며, 교과 과정에서의 성평등에 대한 언급 역시 논쟁 대상으로 구성되었다. 교과과정이 성평등을 동성애 옹호로 개념화하면서 헌법을 위배한다는 주장이 제시된 바 있다(이형우, 유종현, 2023). 2022년 교육과정 개정 당시 교육부는 이러한 보수 단체의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고, 결국 개정 과정에서 ‘성 소수자·성평등’ 용어가 삭제되었으며, 이에 따라 학교 성교육 영역에서도 성소수자에 대한 논의를 하기 어려워졌다.

해당 단체들은 2023년부터 학교 도서관에서의 성교육 도서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시민운동단체의 이름으로 포괄적 성교육을 반대하고, 특히 성평등 관련 도서

1) 2012년 결성되었던 남성연대는 해체되고 2021년부터 신남성연대가 활동하고 있다. 남성연대는 조국, 가족, 균형을 표어로 제시하면서 활동하였으나 현재 홈페이지가 삭제되어 자료가 남아 있지는 않다.

에 대한 항의를 지속하여 도서관과 학교에서 성평등 관련 도서가 폐기되거나, 청구기호로만 존재하고 더 이상 대출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식으로 열람을 제한하는 흐름이 나타난다.

이 글의 목적은 현재 한국 사회에서 시민단체의 형태를 빌어 진행되는 성교육 도서 퇴출 관련 담론의 구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보수 개신교 배경의 학부모 단체들이 성평등 교육 도서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전제는 무엇인지를 분석한다. 또한, 언론 보도를 중심으로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어떻게 의미화되고 있는지를 다루면서, 성소수자 혐오 세력이 제도를 활용하면서 효과를 얻는 담론 전략을 구축하였다는 점을 드러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글은 비판적 담론 분석으로서의 정책 분석 방법론인 WPR(What's the Problem Represented to be?)를 사용하고자 한다(Bacchi, 2009; 2012). 이 분석론이 제기하는 질문은 문제로 재현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출발점으로 하여, 그 가정과 전제는 무엇인가, 어떠한 맥락에서 이러한 문제의 재현이 등장했는가, 이러한 문제 재현에서 침묵당한 것은 무엇인가, 이러한 문제 재현이 만들어내는 담론 효과는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어디서 이러한 문제 재현이 생산되고 유포되는가에 대한 것이다. 이러한 분석틀을 활용하여, 보수 개신교 학부모 단체들의 성교육 도서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무엇을 문제로 재현하는지를 살펴보고, 어떤 맥락에서 이러한 문제제기가 발생했는지를 학교 성교육의 역사적 맥락을 통해 드러내며, 담론의 효과와 그 효과를 발생시킨 장치를 민원이라는 제도를 통해 살펴본다. 그리고 미디어 보도를 통해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어떻게 의미화되는지를 보이고자 한다.

2023-2024 성교육·성평등 도서 폐기 과정

성교육 도서 및 성평등 교육 관련 민원과 이에 따른 도서 폐기 사건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도서 폐기 운동은 2023년 5월 충청남도 충남교육청 산하 모든 도서관으로 ‘꿈기움연구소성장연구소’ 등 단체의 공문이 발송되면서 본격화되었다. 이 공문은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 위배된다면서 성평등 및 성교육 관련 도서 목록을 제시하고 이를 도서관에서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023년 5월 비슷한 시기에 다음세대를 위한학부모연대(이하 다학연)이 ‘우리 아이 서관에서 살아남게 하기’라는 제목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하였는데, 이 홍보물에는 동성애로부터 우리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내용이 강조되어 있었다.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젠더’나 ‘성소수자’를 교과서에서 제거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온 “교육정상화를 바라는 전국 네트워크”를 비롯한 보수 개신교 단체들은 교육과정 개정 공청회 등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종국적으로 교육과정 내에서 ‘성소수

자’ 용어를 삭제하는 성과를 얻은 바 있다. 이를 근거로 하여 이후의 관련된 논의가 교육 과정에 포함되는 것이 불법이라는 주장이 가능해졌다.

당시 학부모 단체로 정체성을 표방하는 보수 개신교 배경의 시미단체들은 2022년 10월 전후 결성되었고 교육과정 관련 공청회장을 점검하는 등 성평등 관련 발언을 막는 방식으로 활동하였다. 또한 학술적 과정을 표방하면서 담론을 구성하였는데, 예를 들어 “성혁명 이념으로 다음 세대를 세뇌하여 차별금지법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작금의 2022년 교육과정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는 동시에 2022 개정 교육과정(시안)의 위헌성·위험성 세미나(11월 2일)를 “진정한평등을 바라는나쁜차별금지법반대전국연합”과 공동 개최하였다. 이때 공개된 세미나 발제문 및 토론문을 보면, 한국의 교육과정에서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이나 성소수자 인정, 피임과 낙태를 교육하는 것을 문제로 지적하고, 이것이 조기성애화를 일으킨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세미나들에서 지적하는 성적 자기결정권 개념이나 피임 교육 등은 포괄적 성교육에서 제시하는 것이다. 이에 포괄적 성교육을 주장하는 페미니즘 교육 단체 등과 적대를 구성하게 되며, 성소수자 언급 자체를 문제삼기 때문에 성소수자 차별과 관련된 쟁점들이 제기된다. 이성숙(2024)은 2022년 교육과정이 유네스코의 포괄적 성교육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에서 핵심개념 7, 8을 제외한 모든 영역이 포함되어 있다고 분석하고 있으나, 포괄적 성교육 핵심개념 7은 섹슈얼리티와 성적 행동, 8은 성과 재생산 건강 항목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개신교 단체들이 주장한 대로 피임 관련 교육 및 성소수자 관련 논의가 삭제된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성교육, 성평등 도서가 정규 교육과정을 위반한다는 민원에 대해 도서관 측이 처음부터 이에 응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지속적인 민원 전화를 받으면서 민원을 수용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다. 도서관 민원이 지속되는 한편으로 교육청이나 시의회와 같은 공공 기관 역시 민원에 응답하면서 도서 폐기 과정을 주도하였다. 2023년 7월에는 서울시의원이 초중고 전체 도서관에 성교육 관련 민간 출판사 발간 도서 17권의 구입 내역을 보고하라고 요구하면서 논란이 시작되었다. 성교육 도서에 대해서만 구입 여부를 확인한다는 점에서 도서관 사서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11월에는 경기도교육청이 관내 초등학교에 ‘일부 성교육 도서에 대해 선정성, 동성애 조장 등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하는 다수 민원과 도의회 및 국회의 목소리가 있다’며 ‘소장하고 있는 성교육 관련 도서 중 부적절한 논란 내용이 포함된 도서에 대해 교육목적에 적합하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는 사실상 보수적 시민단체가 요청한 도서를 도서관에서 열람 제한하게 만드는 효과를 가졌다(몽, 2024.8.28.).

한편 해당 시민단체들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간행물윤리위원회에 총 68권의 도서가 유해도서로 청소년에게 부적절하다는 요지로 심의를 요청하였으나, 간행물윤리위원회는 67권은 유해도서로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고, 유해도서로 지정된 1권의 도서 역시 1개월 뒤 유해도서 지정에서 철회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심의 결과와 상관없이 지속적인 민원 제기로 인해 2024년 6월 기준 경기도에서만 성평등, 성교육 관련 도서 2,528권(517종)이 폐기 혹은 열람 제한이 된 상황이다(몽, 2024.8.28).

한국의 성교육 제도화의 맥락과 ‘포괄적 성교육’

성교육·성평등 도서에 대한 반대 주장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내용 중 대표적인 것은 성에 대해 자세하게 묘사하거나 성소수자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음란하다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성에 대한 보수적 담론은 성에 대한 공적 언급을 금기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성에 대한 교육은 과학의 맥락을 입고, 임신과 출산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전달하는 것만이 음란하지 않은 정보가 된다.

이러한 ‘건전한 성’의 맥락은 현재 한국의 성평등 교육이나 성교육이 처한 난맥상과 맞물려 담론적 효과를 발생시킨다. 한국의 성교육은 사실 1994년 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특별법)에 의거해 의무 규정이 되었고, 이는 성폭력의 맥락에서 성교육을 배치하는 효과를 낳게 되었다(김현경, 2015). 성이 조심해야 할 것, 학생의 입장에서 피해자로만 표상되는 식으로 의미화될 수밖에 없는 맥락적 조건이었다. 또한, 학교 성교육은 학교의 보건담당 교사가 직접 수행하거나,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그런데 특히 외부 강사를 초빙하는 경우, 민원에 더욱 취약한 구조가 된다. 민원을 받으면 해당 기관에서 재초빙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며, 프리랜서 강사인 경우 평판에 손해를 보게 된다. 학교 교사라고 하여 안전하지는 않다. 성교육 내용에 대한 민원을 받게 되면 여러 행정 처리 과정에서 불이익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평등·성교육의 내용은 민원 대응을 예상하면서 조심스럽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이예슬, 2020). 성폭력예방교육 혹은 4대폭력 예방교육과는 별개의 것처럼 성교육이 배치되는 것 역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성교육·성평등 교육이 교사들의 입장에서는 위험한 것으로 여겨진다. 사실상 교육 과정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 않는 교육인데 내용은 항의를 받기 쉽기 때문에 트랜스젠더 이슈 등은 다루어지기 어렵다. 이에 따라 학교 성평등 교육이나 성교육은 기존의 젠더 규범이 갖는 성차별성을 비판하고, 성별 고정관념을 타파하는 내용에 한정되어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 엄혜진과 신그리나(2019)는 이러한 학교 성평등 교육, 성교육이 페미니즘의 가치를 내세우지만 젠더 규

범을 재생산하는 효과가 있으며, 개인의 윤리 차원으로 성평등 인식을 협소하게 만드는 한계를 비판한 바 있다. 남미자와 이희진(2022)은 학교 성교육에 성적 시민권을 이해하게 하는 시민성 교육의 결합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문제는 성교육 자체가 어려워지는 환경에서, 젠더 고정관념에 대한 비판조차도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학교 성교육은 점차로 기피되는 주제가 되고 있어 학생들이 성지식 및 성평등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방식이 공교육을 통해 이루어지기는 어렵게 되었다. 이는 학생 당사자들이 도서를 통해 성에 대한 인식과 성평등에 대한 감수성을 키워나가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진다. 성교육 도서 시장의 성장은 여성과 성소수자 청소년의 요구에 부응하는 의미가 있었다. 포괄적 성교육의 맥락에서²⁾ 논의되는 이 주제들은 스쿨 미투 등을 경험하면서 성평등에 대한 다른 이해를 요청하는 여성 청소년들의 요구에 맞는 것이었다. 바로 이러한 도서들을 문제 삼고 나선 것이 최근의 도서관 성교육 도서 폐기 논란이다. 보수적 학부모 단체에서 심의를 요청하는 성교육, 성평등 교육 도서는 대체로 여성이 자신의 신체에 대해 이해하고, 성적 욕망에 대해 이해하는 성적 주체성을 주제로 삼는 경우, 그리고 퀴어 동료의 존재를 존중하는 법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책들이다.

물론 이러한 주제가 성교육 도서를 통해서만 다루어졌던 것은 아니다. 2010년대 전후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포괄적 성교육을 한국적 맥락으로 재구성한 성교육이 시행되고 있었다. 몸에 대한 이해,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성적 자율성과 자기 결정권에 대한 논의가 시립문화센터 및 성문화센터 등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시행되었다. 그런데 2015년 교육부가 발표한 국가수준성교육표준안은 포괄적 성교육으로 재구성되던 성교육·성평등 교육의 내용을 되돌렸다. 해당 교육안은 성소수자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고, 여성과 남성을 본질주의적으로 묘사하였고 성폭력 예방은 위험한 자리에 가지 않는 것으로 가능하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내용으로 교육표준안이 구성된 것은 당시 보수적 시민단체 및 보건교사회 중에서도 보수적 입장을 주로 반영하였기 때문이다. 이 교육안은 사실상 보수 개신교 단체의 자문을 통해 구성되었다고 알려져 있다(김대유, 2016). 하지만 해당 교육안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여론으로 구성되면서 성교육 표준안은 사실상 폐기되었다.

‘올바른 성교육’을 할 수 없게 되고 학생들의 입장에서 학교 교육 외의 성평등 지식에 대한 습득 경로가 다변화되는 현실에서 성교육 도서를 주요 문제로 재현하는 것은

2) 포괄적 성교육은 1990년대부터 미국에서 만들어진 개념이다. 1991년 미국의 가이드라인 전문위원회(National Guidelines Task Force)에서 <포괄적 성교육 가이드라인>을 최초 발간한 이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되었으며, 최근 유네스코에서 2018년 <국제 성교육 가이드> 개정판을 발간하면서 포괄적 성교육에 대한 국제적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오경미, 2023).

개신교 보수 단체로서는 자연스러운 귀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010년대 후반 ‘나다움어린이책’에 대한 문제제기에 이어, 2023년 도서관 성교육 도서 폐기 민원은 보수적 개신교 배경의 학부모 단체가 주장하는 ‘올바른 성교육’을 관철하려는 반복적 시도의 양식들이다.

‘건전한 성’과 가족의 수호

보수적 학부모 단체들이 주장하는 건전하고 올바른 성의 의미는 생식에 한정된 것이다. 개신교 단체나 연구자들은 성에 대한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절제 혹은 금기로 설명한다. 이러한 금기가 중요한 이유는 첫째로는 성이 오로지 결혼 내에서 실천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혼에 이르기 전 성욕은 해소되어야 하는 욕망이 아니라 절제되거나 승화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는 종교적 수양의 형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고수진, 2021).

청소년 보호론에 따른 성교육 담론에서는 신체 발달에 대한 과학적 지식과 성적 실천의 위험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혼을 통해 준비되기 전에는 성적 실천은 유예되어야 하는 것이고, 성충동은 조절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바탕이 되고 있다. 다만 성교육에서 성적 충동 자체는 언급되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청소년에게 성적 호기심을 갖게 하는 것 자체가 문제적이다. 따라서 보수적 학부모 단체들은 피임법을 가르치는 것은 청소년의 성행위를 유도하는 것이고, 동성애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동성애를 조장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내세운다(꿈키움성장연구소 외, 2023.9.17.).

동성애 조장과 같은 표현은 어떤 점에서 성소수자 차별이 되는가? 루인(2015)은 퀴어 문화 축제를 반대하는 보수 개신교 세력이 동성애가 오염된다는 주장을 펼치는 것을 비판하면서, 이것이 동성애가 오염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염된다고 해도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동성애에 대해 알게 된다는 것은 자신이 알지 못했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알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혹은 동성애에 대한 열린 인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오히려 성소수자에 대해서 알면서도 이를 존중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보수 학부모 단체가 동성애 자체의 언급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알지 않겠다는 선언이자 존중하지 않는다는 혐오 표현이기도 하다.

성소수자의 존재에 대한 부인은 이성애 정상 가족의 수호를 위한 것이다. 재생산적 시간성은 이성애자의 생애 과정이 아기를 낳아 키우고 늙는 것을 규범화하는 것에 관련되는데, 이에 대비하여 퀴어의 삶은 재생산이 가정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기이한 - 비선형적인, 그래서 난잡한 시간성을 구성한다(Halberstam, 2005). 퀴어의 존재는 그

자체로 이성애 가족의 불안정성과 모순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가족의 수호’를 위해 이성애 가족만 가족으로 상정되는 한 동성애자는 가족의 위기이자 문제로 재현될 수밖에 없다.

성은 가족과 국가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음란 개념 역시 이를 통해 재정의된다. 최근 다수 학부모단체 명의로 된 시위와 성명서 발표의 대상이 된 티빙(TVING)의 OTT 플랫폼 전용 드라마 <대도시의 사랑법>은 ‘동성애 미화하는 음란 드라마’라고 명명 되면서 반대 시위 대상이 되었다. 방영 전이므로 아직 어떤 묘사도 확인되지 않아 법적 음란의 개념을 다룰 수는 없는 상황임에도, 건전한 성과 불건전한 성(음란)의 이분법 구도 속에서 정상 가족을 벗어나는 것이 음란이기에 소재 자체만으로도 음란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동성애에 대한 언급만으로 음란한 것이라면 포괄적 성교육은 성소수자의 존재를 인정할뿐더러 이를 존중할 것을 강조하기에 결국 가족을 무너지게 하고 국가의 훼손을 야기할 것이다. 페미니즘의 성적 자율성에 대한 논의 역시 가족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 보수적 관점에서는 성적 영역을 권리로 다루지 않으며, 이에 따라 성적 영역안에 존재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성평등 관점을 거부하고자 한다. 페미니즘 맥락에서 성적 자율성을 실천하면서도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도록 하는 것이 성교육 도서들의 핵심적 주장들이며 이것이 포괄적 성교육의 메시지이기도 하다. 페미니즘 교육을 위한 노력에서 성교육이 성평등 교육과 관련된 핵심적 쟁점이 되는 이유는 이처럼 성이 생식의 문제일 뿐 아니라 문화적, 사회적 권력의 장이자 담론적 투쟁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특히 몸에 대한 권리 중 중요한 것이 재생산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다. 이러한 성평등 교육은 임신중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는 방식으로 가족 구성을 위협한다는 것이 보수 단체의 주장이며 이러한 맥락에서 성교육 도서는 문제로 재현된다.

성교육 도서를 심각한 사회 문제로 재현하기 위해 보수 단체들은 ‘법과 제도’라는 담론적 도구를 활용한다. 이제까지 우리 교육과정은 포괄적 성교육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보건교과서에 피임과 임신 중지, 성에 대한 지식을 포함해 왔으며(김대유, 2021) 성교육 영역에서 성소수자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인권 영역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의미화해 왔다. 최근의 성교육 도서에 대한 문제 제기를 수월하게 만든 것은 2022년 교육과정 개정이다. 2022년 이후, 교육과정이 개정됨에 따라 과거의 인권 교육이나 성교육이 내용이 ‘불법화’될 수 있다. 이는 제도를 활용하는 데 있어 형식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함으로 하여 성교육 관련 도서 폐기를 보다 본격화할 수 있도록 하는 담론적 자원이 되었다.

제도를 활용하는 혐오

1) 민원과 겉모양 민주주의(Veneer of Democracy)

성교육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고, 성평등/성교육 도서 퇴출 운동을 벌이는 단체들은 과거에는 반동성애 단체로 명시적으로 정체성을 드러냈지만, 최근에는 자녀의 교육을 염려하는 ‘학부모/시민단체’의 위치에서 성평등 도서 퇴출 운동을 펼쳐나가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청소년의 교육에 대해 우려하는 학부모의 위치는, 교육의 3주체가 교사, 학생, 학부모라는 점에서 교육의 주체로 스스로의 정체성을 선언하며 교육에서의 발언권을 획득하려는 것이다. 발언권의 장치로 이들은 민원 제도를 활용한다³⁾.

민원이라는 제도적 장치를 활용하는 것은 한국 사회의 민원 제도가 국민의 구체적 요구에 대응 및 집행하는 행정을 표방하면서 가능한 민원의 요구에 응하는 것을 담당 기관의 중요한 책무로 여기고 있다는 점에서 가능해진 것이다. 최근 들어 악성 민원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지만(이원강 외, 2024), 민원에 응답하는 것은 특히 공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책무로 인식된다. 국민이 원하는 행정, 국민의 요구에 대응하는 행정으로 정의되는 민원 행정(라휘문 외, 2006)은, 공공부문에 대한 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민주적인 순기능이 강조된다(선우숙, 김상숙, 2023). 하지만 최근 들어 반복적 민원으로 인한 공무원의 피로와 업무 역량 약화 등이 문제로 지적되기 시작했다. 사적 영역에서는 더욱 더 서비스의 영역으로 민원 응대가 강조되기에, 민원 내용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도 소비자를 최우선으로 응대하는 서비스 노동자의 감정 노동이 과도하게 요구되며 직원의 감정적 소모가 극심해지는 경우가 많다 (Wang et.al., 2022).

악성 민원의 정의가 법제도적으로 명확한 것은 아니다. 윤영석(2022)은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민원, 폭력성 민원 등을 악성 민원의 범주에 넣으면서 정상적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비합법적인 내용의 이행을 요구하는 민원을 악성 민원으로 분류한다. 이에 따르면 악성 민원은 과정상의 문제, 즉 반복이나 폭력등의 절차상 과실이 민원인에게 있는 경우 그리고 내용상의 불법이 있는 경우로 분류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도서관에서의 성교육 도서 폐기 민원은 악성 민원으로 분류하기 어려워진다. 물론 반복적 민원의 문제를 이야기할 수는 있으나, 이제까지 반복 민원으로 인정되는 데에는 소수의 민원인이 단기간 다수의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3인이 5,142건의 민원을 제기한 경우) 등이 주로 언급되는 등, 소수의 문제적 인물들이

3) 민원을 독려하는 다양함 방식들이 활용되고 공유된다. 동성애와 각종 악법 저지 및 폐지를 선언하는 거룩한 방파제 운동 등에서 특정 사안에 대한 민원 제기 방법을 공유하는 등의 활동을 보인 바 있다.

존재한다는 전제로 논의되는 경우가 많다(윤영석, 2022). 하지만 성교육 도서 폐기 민원과 같은 형태는 형식상 다수의 민원 형태를 갖게 된다. 성소수자 관련 논란이 발생한 경우, 교회 공동체를 통한 다수의 동원이 일어나 형식적으로는 다수의 목소리로 존재하게 되기 때문이다.

내용상의 불법 역시 현재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없기에 ‘성교육 도서가 동성애를 언급하여 문제이다’라는 주장을 불법으로 판단할 근거가 없다. 현재의 민원 구조에서 민원 내용에 대한 공론장의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도서관 성교육 폐기 민원은 이러한 사회적 논의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 행정적 조치가 먼저 수행되었다. 이는 도서관 민원을 경험하는 사서들의 불안정한 지위에도 그 원인이 있다. 사서교사는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2조와 시행령에 따라 반드시 배치되어야 하는 전문인력이지만, 2022년 기준 초등, 중등 교육과정에서 도서관 전문인력을 배치한 학교는 전체 48%에 불과하며, 이렇게 배치된 사서전문인력 중 12%만 정규직이다(변진경, 2023.3.10.). 교육공무직 사서와 사서교사를 필요에 따라 기간제로 배치했다가 해고하는 등의 불안정한 환경에서, 다수의 민원 경험이 성교육 도서의 배치를 어렵게 하는 것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2024)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도서관 담당자 중 53.2%는 성평등·성교육 도서 ‘폐기 또는 열람제한 압력이나 지시를 직접 혹은 목격한 경험’이 있고, 48.2%는 ‘구입 방해 압력이나 지시를 직접 받거나 목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처럼 다수의 도서관 민원을 경험하는 사서들의 입장에서 학부모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민원에 저항하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학교가 빠르게 문제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성교육 관련 도서를 제거하는 것을 선택하는 경우, 사서 교사 혼자 이를 대응할 수는 없는 일이다.

민원이라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겉모양만 활용하는 것이다. 민원이 ‘시민’의 의견인 한, 그리고 한국 사회에 특정한 의견 표명 방식을 차별로 논의할 수 있는 틀이 없는 한에서는 민원의 형태로 이어지는 성소수자에 대한 공격은 수용되는 구조이다. 이를 겉모양 민주주의(Veneer of Democracy)라고 부를 수 있다(Fetman, 2017). 이 개념은 교육 과정 내에서 특정한 정책이나 주장들이 수용 가능한 형태로 제시되어 정치 및 관료적 시스템이 유지되도록 하지만, 결국 그 효과가 정책 영향을 받게 되는 개인에게 소외와 차별을 경험하게 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명명하기 위해 제시되었다. ‘민주주의’의 외양으로 제시되는 다수의 민원, ‘선량한 풍속’으로 대표되는 가치 수호의 주장, 그리고 교육과정이나 관련 법(학생인권조례 등)을 제정/개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 후 그 효과로 구성된 법과 제도를 다시 근거로 하여 성소수자 차별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구성하게 되는 과정들은 변듯한 민주주의의 외관을 갖는다. 이는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반대 민원이 증가하면서 퀴어문화축제가 치루어지던 공간

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서울시에서 2023년 퀴어문화축제 측의 세미나실 대관 신청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는 데 민원이 많은 행사에 대한 우려가 그 이유로 설명되었다는 사례 등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민원의 과정에는 개신교 배경의 정치인이 이를 승인하는 과정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서울과 충남 그리고 경기도에서의 성교육 및 학생인권조례 관련 논의는 정치인의 개입이 중요한 시발점이 되었으며 해당 정치인은 민원을 근거로 민의를 대변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우리 사회의 성소수자 이슈와 관련된 여러 과정은 해당 담론과 정책의 ‘주체’를 주장하는 민원의 외양을 한 민주적 과정을 통해 효과적으로 성소수자의 권리를 침해한다.

2) 민원의 다각화 - 심의 결과를 문제화하기

성교육 도서 폐기는 교육의 영역에서 일어나기에 민원 제도의 활용 전략이 다변화되는 양상도 나타났다. 보수적 개신교 단체에서 간행물윤리위원회에 청소년유해간행물 지정을 신청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한국에서 청소년유해간행물로 지정되는 경우 해당 도서는 청소년에게 유통되지 않기에 자연스럽게 초중고 도서관에서는 사라지게 된다. 이는 해당 도서관에 직접 도서를 지정하여 폐기하도록 신청하는 것보다 효과적으로 성교육 도서를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민원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에는 2024년 2월, 그리고 2024년 4월 총 68권의 도서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되었다. 심의 신청 사유는 해당 성교육 도서 내용이 음란 도서라는 것으로, 해당 도서에 성행위에 대한 구체적 묘사 혹은 여성, 남성의 신체에 대한 상세한 묘사 등이 실린 것과, 동성애가 비정상적 성행위가 아니라고 제시한 것 등을 음란의 이유로 꼽았다(꿈키움성장연구소 외, 2023.10.10.).

간행물윤리위원회는 2024년 4월 심의에서 대상 68권 중 1권만 유해도서로 지정하였다. 유해도서로 지정된 것은 스웨덴 성교육 도서의 번역본인 <일단, 성교육을 합시다>였고, 청소년 유해 판정을 한 이유로는 해당 책 내에서 발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한 것과, 퀴어 용어를 설명한 것을 들었다. 이에 대해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 “성교육 도서의 유해도서 지정과 대규모 폐기에 대한 대한출판문화협회의 입장”(2024.5.9.)를 발표하여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으며, 해당 도서가 여러 국가에서 실제 성교육 교재로 사용된다는 점이 유해도서가 아니라는 근거로 제시되었다. 반면 보수 개신교 배경 학부모 단체들은 간행물윤리위원회가 성소수자의 눈치를 보고 건전한 성 담론을 형성하는 데 문제가 되는 판결을 했다는 항의 활동을 이어갔다. 2024년 6월에 재심 결과, <일단, 성교육을 합시다> 역시 유해 도서가 아닌 것으로 최종 결정되었다.

이후 학부모 단체들은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문제삼고 있다. 좋은교육시

민모임, 바른교육학부모연합,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제주교육학부모연대, 올바른 다음세대세움연구소, 꿈키움성장연구소, 경기도학부모단체 연합 등 학부모와 교육을 내세우는 학부모 단체를 비롯하여 반동성애기독교시민연대가 67개 시민단체 명의로 “직무 유기한 간행물윤리위원회 심의위원들을 문책하고 편향적·비교육적 심의위원 선정 즉각 철회하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이 성명서는 대한어머니회가 변질된 페미니즘 단체라고 규정하고, 한창완 위원장이 음란도서에 면죄부를 준 장본인이라고 주장하는 등 68권의 도서가 음란도서임을 이미 기정사실화한 후, 페미니즘이나 성소수자 옹호를 하는 위원회 구성으로 인해 진실이 드러나지 못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반동성애기독교시민연대, 2024.8.27.)

심의를 신청하고 그 결과에 승복하지 않은 채로 ‘위원회의 편파’를 문제삼는 것은 한편으로 민주주의의 원리로서의 공정성 담론에 기대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러한 민주주의 원리로서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규정이 수많은 ‘이미 결정된’ 심의를 하도록 한다. 대표적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여당 추천, 야당 추천, 대통령 추천의 구성을 하고 있으나 이에 따라 대부분의 정치적 쟁점에서 6:3의 심의 결과를 보이고 있다(최영재, 2024). 위의 성명서가 심의에 적합한 인사를 추천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불교계 인사가 포함되었다는 데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실제 위원회의 구성에서 다수결을 차지할 수 있는 위원 구성이 심의를 결정하게 되는 겉모양 민주주의의 효과를 충분히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비보도와 대항담론을 위한 공론장의 축소

김대유(2021)는 성교육이 현재 교육 과정에서 핵심 과정이 아닌 데에도 사회적 논란이 되는 것은 보수적 시민단체의 문제제기와 관련이 깊다고 분석한 바 있다. 성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부여하는 인식은 한국에 있어서는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강화된 것으로, 성교육이 페미니즘 이론과 실생활을 접합하는 중요한 담론 장소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교육 도서와 관련된 논란은 진보적 언론에서 보다 많이 다루어지고, 보수 언론은 비보도로 대응하고 있다.

도서관 성평등 도서 폐기에 대한 언론의 보도는 그 자체도 많지는 않지만, 언론사의 성향에서 큰 차이가 있다. 전국일간지 중 보수 언론으로 분류되는 동아일보는 2023년 1월부터 2024년 8월까지의 기간 동안 1건, 중앙일보가 1건을 보도하였고 조선일보는 빅카인즈 검색 기준으로 1건도 보도하지 않았다⁴⁾. 반면 경향신문은 30건,

4) 빅카인즈는 종이신문의 기사를 기준으로 하여, 조선닷컴 등 온라인에서 검색되는 기사가 수록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온라인 기사를 검색한 경우에도 조선일보는 1건만 보도한 것으로 나온다. 국민일보는 개신교 계열의 언론으로 21건을 보도하였으며 이는 개신교 단체 활동을 전달하는 기사 내용이 대

한겨레는 19건을 보도하였고 한국일보가 9건을 보도하였다. 동아일보의 보도 내용은 성교육 도서 폐기 사건이 단독 주제가 아니고 여성가족부의 성인권 교육 사업 축소와 관련하여 언급된 것이 전부이며, 중앙일보는 서울시의회의 음란물 대응 활동을 보도 하면서 성교육 도서 폐기를 전달하여 사실상 성교육 도서와 음란물을 동치하는 주장을 별도의 문제제기 없이 전달하는 데 그친다. 한편 경향신문의 보도수가 많은 것은 해당 신문의 칼럼니스트 구성에서 여성과 성소수자가 많고 이들이 반복적으로 문제제기를 한 경우가 반영된 것이다.

비보도 혹은 무보도 현상은 사실 저널리즘적으로는 구성되기 어려운 논의이다. 보도 내용의 선택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기에 특정한 사실이 언론에 의해 보도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자체로 권력 구조를 반영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⁵⁾ 그러나 저널리즘 윤리에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건을 언급하지 않는 데 대한 정당성 논쟁은 끊이지 않는다. 특히 언론이 정치적 성향에 따라 사건을 의미화하는 방향이 달라지는 정파적 한국 언론의 특성상, 특정한 언론의 성향에 따른 보도 건수의 차이는 이를 비보도 현상으로 의미화할 수 있도록 한다(김수정, 2011). 성평등 교육을 둘러싼 논란은 보도되지 않음으로써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정상화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분명한 차이는 이제까지의 성소수자 관련 보도에서 보수 언론과 진보 언론이 견지해온 태도와도 관련이 있다. 강신재 외(2019)는, 보수 언론과 진보 언론은 성소수자 관련 이슈에서 기사 수의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보수 언론이 비보도를 주로 택함으로써 그 차이가 커지는 것이었다. 또한, 이 연구에서 보수 언론은 성소수자 관련 사건의 정보 전달 기사만을 제공하지만 진보 언론들은 인권과 제도적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문제 해결형 기획 기사를 다수 작성하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성평등 및 성교육 도서 폐기 사태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수 언론들은 이를 보도하지 않았으며, 보도한 기사 내용에서도 보수적 학부모 단체의 입장만을 제시한다. 즉, 성교육 도서를 음란도서로 지정 사실화하여 제시한 뒤, 서울시의회에서 이를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조치할 것이라고 보도하여 성교육 도서의 폐기가 정상화 과정임을 암시한다.

반면 진보 언론들은 성평등 교육 및 도서 폐기에 대해 적극적 반대를 표명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및 페미니즘 교육 관련 단체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면서, 성평등 도서 폐기 사건을 의제화하는 데 노력하여 왔다. 예를 들어 경향신문이나 한겨레

부분이었다.

5) 특정 주제의 발제가 어렵다는 증언이 있지 않은 한 특정한 현상의 무보도 문제를 문제화하기는 어렵다. 젠더 주제 보도의 경우 관련 연구에서 특정한 언론사에서 해당 주제의 기사 발제 - 기자가 아이템을 선정하여 취재 의향을 밝히는 것 - 을 상사가 꺼린다는 이야기가 제시된 바 있다(류란, 2022).

는 2023년 7월부터 관련 사건을 꾸준히 추적 보도하였고, 단순히 양측의 입장을 전달하기보다는 성평등 교육 관련 민원이 검열에 해당하고, 도서관의 지적 자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점과, 해당 주체가 보수적 학부모 단체라는 점을 명시하는 등의 보도 방식을 보이고 있다. 성교육 도서 폐기 관련 논란을 성소수자 차별의 맥락에서 의미화하려고 하여 기획 기사를 다수 구성하기도 하였다.

비보도 현상은 담론장에서의 주체를 축소하고 사회적 논의를 줄이는 효과를 발생시킨다. 성교육 도서 폐기를 둘러싼 담론에서 공론장의 논의가 어려워지는 기제는 크게 두 가지이다. 먼저 해당 문제가 논의되지 않게 됨으로써, 즉 문제 자체가 사회적으로는 재현되지 않음으로써 이 문제의 당사자가 개신교와 성소수자라는 두 축으로 축소되는 담론적 과정이 구축된다. 그리고 이렇게 당사자가 축소되면서 이는 서로 다른 평행적 인식론간의 싸움처럼 표상된다. 보수 개신교 단체에서 주장해온 대로 건전한 성과 성윤리를 위해 혐오할 자유를 표현한 것이므로 이것이 정당한 논의의 한 축이 될 수 있고, 이에 대응하는 성소수자 관련 인권 단체나 페미니즘 단체는 정체성 정치 혹은 이데올로기 관련 주장을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개신교 단체가 재현한 성교육 도서의 문제와 성소수자 및 성교육 관련자가 주장하는 인권에 대한 주장이 병렬적으로 배치되고, 각 주장과 입장을 공론장에서 다룰 수 있는 틀, 즉 차별 금지 혹은 인권 문제로 해석할 담론적 자원을 갖지 않은 한국 사회에서 이 두 주장은 서로 다른 집단 간 갈등이자 해소될 수 없는 갈등이 되어 사회적 논의를 전개하는 것이 오히려 대중의 피로도를 높이는 일로 인식된다. 성소수자 관련 의제가 점차로 주변화되는 과정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는 우리 사회가 성소수자 관련 의제에 대한 내용적 판단을 중지하고 있다는 점이 일차적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판단의 근거 없음’(포괄적 차별 금지법 없음)을 들어 차별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현재의 권리 침해를 자연화하게 되었다. 이렇게 내용적 판단, 즉 차별에 대한 판단을 미루어 두는 대신 과정에 대한 판단이 정당성 판단을 대체하게 되는 것이 담론장의 논의를 축소하게 되는 기제로 작동한다. 민원 과정과 시위, 성명서 발표 등은 모두 민주적 과정에서의 주어진 과정적 자유로 인정받으며, 다수의 민원에 공공 기관이 응답하는 것 역시 정당한 행정적 집행이다. 절차적 과정을 따른다면 그 내용을 문제삼지 않게 되는 것이다. 성소수자 관련 혐오 표현을 포함한 보수 개신교 단체가 대중에게도 문제로 지적된 사례가 2022년 교육과정 공청회 난입 사건이었는데(강운주, 손준종, 2023), 민주주의로 의미화된 과정을 훼손할 경우는 그 주장에 대한 판단과 별개로 문제로 인식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과정은 언제나 성소수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2024년 서울시에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시민청 대여를 거절하면서 ‘행사 신청명과

실제 행사명이 다르다'는 논리를 활용한 것은 내용에 대한 언급 없이 과정을 문제삼는 형식으로 성소수자의 권리 행사를 제한하였다. 차별 판단을 중지한 채로 내려지는 결정은 형식적 과정을 근거로 삼게 하며 이에 전제된 다수의 민원은 민주적 다수결의 원리로 정당화의 근거가 되는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과정의 정당성이 내용의 문제를 대체하는 것은 결국 우리 사회가 겉모양 민주주의를 유지하면서 민주주의가 상정하는 평등과 차별, 권리와 자유에 대한 논의를 충분히 거쳐오지 못한 결과일 것이다.

내용에 대한 논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과정적 정당성의 보증이 어려워진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대항담론에서 '과정'의 정당성을 보증하기 어렵게 된 것은 2022년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성교육 도서의 민원 내용, 즉 해당 도서가 교육과정과 맞지 않다는 주장이 근거를 갖게 되는 반면, 학교와 사서들의 입장에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국내 교육과정이라는 담론적 자원은 사라지게 되었다. 이에 도서관 사서, 성교육 도서 폐기에 대응하는 시민단체들이 활용하는 담론 자원은 국제적 기준이다. 유네스코의 포괄적 성교육 가이드라인에 맞추어진 내용이라는 점, 특정 도서가 유해도서로 지정되었을 때에는 해외 15개국 이상에서 인정받은 도서라는 점, 성교육에 성소수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유엔인권위원회의 권고 등이 해당 도서의 유지를 주장하는 근거로 활용된다(타리, 2024.8.28.). 다른 하나의 국제 기준은 도서관의 지적 자유이다. 미국도서관협회(ALA)의 '도서관관리선언'에서 1939년 시작된 도서관의 검열에 대한 비판은 한국에서는 2024년 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 지적자유 가이드라인으로 이어지는데, 이 가이드라인의 제정에는 성교육 도서에 대판 폐기 논란이 중요한 계기가 된다(김신영, 2024). 하지만 이러한 국제 기준이라는 담론 자원이 사회적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논의의 장이 거의 제공되지 않는 상황에서, 민원에 따른 도서 폐기는 진행중에 있다.

나가며

성교육에서 섹슈얼리티에 대한 언급이 금지됨에 따라, 성교육 사교육 시장이 늘어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소위 아들 성교육이라고 불리는 초등 고학년 남학생 대상 성교육으로 소요 비용이 상당하다. 소그룹 성교육이라고 불리는 이 성교육은 2-6인의 그룹이 모여 진행하는 교육이다(송윤경, 2024.8.26.). 공적 교육 과정에서 성교육과 관련된 논의가 사라지고 있는 과정에서 교육의 3주체 중 청소년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기 어려운 상황 역시 계속되고 있다.

개신교 세력이 청소년을 주요한 담론 대상으로 삼는 데에는 타락한 청년 세대에 밀

리고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되어 있다(윤대산, 2024). 이미 BL, 동성애 미화 드라마 등에 노출되어 성소수자에 대한 우호적 인식을 보이는 청년 세대를 교화할 수 없다면, ‘방파제’를 세워 미래 세대의 오염을 막겠다는 전략을 구성하게 된 것이다. 동성애 반대관련 단체나 조직들이 사용하는 은유들에는 오염을 막고 건전한 가족을 수호해야 한다는 가부장제와 개신교 교리의 결합적 양태들이 반영되어 있다.

국내에서 성소수자 관련 논의는 공히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수렴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비단 개신교 보수 단체의 핵심 활동이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대항담론을 구성하는 경우에도 차별금지법의 필요를 제기하기 때문이다. 이는 성소수자 혐오가 자연화되는 전략이 내용을 판단하지 않는 형식적 민주주의 구조를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결과를 얻고 있다는 점에서 내용 판단의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아직 혐오/차별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법제도적 틀이 부재하기에 누군가의 존재를 문제 자체라고 재현하는 주장과 존재에 대한 인정을 요구하는 주장을 평평하게 대하고 해당 의견과 주장의 제시 과정이 정당한지만을 따질 수 있는 가능성만이 남아 있다. 성소수자 차별에 대한 논의가 수십년간 진전되지 못하는 이유이고 결과가 차별금지법안으로 수렴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해결책이 아니라 해결을 위한 논의의 출발점이라는 것 역시 분명하다. 한미 예비 교사들의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한 연구에서 미국의 참여자 일부가 동성애 혐오에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침묵을 유지한 반면(즉 명시적 동성애 혐오를 표현하지 않는 반면) 한국의 참여자들은 명시적으로 혐오를 표현한 사례(Shin, 2019)에서 차별과 혐오에 대한 사회적 제도화는 그저 출발점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무엇보다, 민주주의의 실질에 대한 논의가 함께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차별에 대한 논의를 미루어둔 채로, 민주주의의 외양을 승인하는 경우 사회적 차별의 재생산을 방조하게 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강신재, 이윤석, 조화순(2019). 한국사회의 매체 정파성과 성소수자 담론 텍스트 분석. <정보사회와 미디어>, 20(2), 145-174.
- 강운주, 손준종(2023). 성소수자 관련 교육정책에 대한 반동성애 담론 분석: 혐오를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33(3), 27-73.
- 고수진(2021). 섹슈얼리티 사회를 살아가는 청년을 위한 기독교적 성 교육. <장신논단>, 53(5), 407-431.
- 김대유(2016). 국가수준 학교성교육표준안의 쟁점과 논의. <한국보건교육학회지>.

- 2(1), 1-23.
- 김대유(2021). 아동 성교육 도서의 선정성 논란에 대한 고찰 - 여가부의 나다움 어린 이책 선정 사업 시비를 중심으로 -. <한국보건교육학회지>, 7(1), 1-13.
- 김신영((2024). 도서관 지적자유 침해 양상과 대처방안.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5(2), 189-217.
- 김현경(2015). 여성주의 성폭력예방교육의 모색. <한국여성학>, 31(2), 55-89.
- 남미자, 이희진(2022). 초중등학교 성교육의 대안적 접근: 성적 시민권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38(1), 37-71, 1
- 라휘문, 김미경, 송창석(2006). 민원행정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한 민원제도분석 및 발전방향.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6(3), 241-263.
- 루인(2015). [혁명의 나비효과] 퀴어문화축제와 LGBT/퀴어를 향한 기독교 근본주의 집단의 언설을 다시 생각하기. <실천문학> 119. 317-325.
- 몽(2024.8.28.). 성평등성교육 도서 퇴출 사태 경과. 성평등·성교육 도서에 대한 열람 제한 및 폐기 사태 대응 토론회 발표 자료집.
- 변진경(2023.3.10.). “왜 우리 학교 도서관에는 사서 선생님이 없나요?”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724>
- 선우숙, 김상숙(2023). 감정노동이 공공봉사동기(PSM)에 미치는 영향: 악성민원과 사회적지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61(4), 89-116.
- 성열관, 안상진, 이지은(2024). 서이초 사건 이후 형성된 담론 프레임의 특징 및 한 계. <한국교육>, 51(1), 69-94.
- 엄혜진, 신그리나(2019). 학교 성평등교육의 현실과 효과. <페미니즘 연구>, 19(1), 51-90.
- 윤근혁(2023.8.22.). “성교육 책 18권, 보고하라”...서울시의원 ‘검열’ 논란. 교육언론 창. 2023.8.22.일자. <https://www.educha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7>
- 윤영석(2022). 악성민원의 실태와 그에 대한 대응. <경희법학>, 57(2), 113-146.
- 이성숙(2024). 2022 개정 실과교육과정에 따른 실과 성평등교육 수업 방안 탐색. <한국실과교육학회지>, 37(3), 53-74.
- 이예슬(2020). 페미니즘 실천으로서의 성평등 교육 : 초등 교사들의 경험과 협상. 서울대학교 여성학협동과정 석사학위논문.
- 이원강, 김태곤, 구주영(2024). 악성민원인의 행태와 악성민원 대응체계가 공무원 직무인식에 미치는 영향: 서울특별시 공무원을 중심으로.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18(2), 1-48.

- 이형우, 유충현(2023). 2022년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 나타난 성평등 개념의 위험성: 상징정책의 관점에서. <기독교교육정보>, 76, 167-199.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2024. 2024 학교 내 성평등·성교육 도서 구입 방해 및 폐기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 지영준(2021).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논의와 가짜뉴스. <교회와 법>, 7(2), 168-224.
- 최영재(2024). 한국방송심의 제도의 실패와 헌법적 정당성 개혁 방안. <언론과법>, 23(2), 1-47.
- 타리(2024.8.28.). 성평등 교육과 포괄적 성교육의 의미. 성평등·성교육 도서에 대한 열람제한 및 폐기 사태 대응 토론회 발표 자료집.
- Bacchi, C. (2009). *Analysing policy*. Pearson Higher Education AU.
- Bacchi, C. (2012). Introducing the ‘What’s the Problem Represented to be?’ approach. *Engaging with Carol Bacchi: Strategic interventions and exchanges*, 21-24.
- Chen, P. J. (2023). Queer feminist assemblages against far-right anti-“Anti-Discrimination Law” in South Korea. *Journal of Lesbian Studies*, 28(3), 518-524
- Fetman, L. J. (2017). Wiping Away the “Veneer of Democracy” to Expose the School-Level Effects of Arizona’s Language Policy. *Leadership and Policy in Schools*, 17(2), 264-295.
- Halberstam, J.(2005). *In a Queer Time & Place: Transgender Bodies, Subcultural Lives*.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 Heo, A. (2021). The Christian Right and Refugee Rights: The Border Politics of Anti-communism and Anti-discrimination in South Korea. *Religion and Society*, 12(1), 86-101.
- Shin, K. (2019). A comparative analysis of Korean and American prospective teachers' perceptions of LGBTQ issues. *Education as Change*, 23(1), 1-22
- Wang, Y., Wang, T., & Gui, C. (2022). A meta-analysis of customer uncivil behaviors in hospitality research. *Journal of Hospitality Marketing & Management*, 31(3), 265-289.
- 1027한국교회200만연합예배및큰기도회조직위원회, 2024. <10.27 연합예배를 위한100대 기도제목>. <https://rebuild-kc.com/34/?idx=116311971&bmode=view>

꿈키움성장연구소 외, 2023.9.17. 우리 아이 성범죄자 만드는 조기성애화 교육 도구
인 음란도서 퇴출하라. 성명서.

꿈키움성장연구소 외, 2023.10.10. 간행물윤리위원회 민원 접수 내용.

반동성애기독교시민연대, 2024.8.27.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직무 유기한 간행물윤리위
원회 심의위원들을 문책하고 편향적·비교육적 심의위원 선정 즉각 철회하라 성명서.